

인권, 나랑은 관련 없어

법률사무소 의담
서 정 현 변호사

강사소개

서정현 변호사

010-2025-8694

nackboom@naver.com

법률사무소 의담 변호사

수원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장안대학교 행정법률학과 객원교수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변호사단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대리인

1. 티비속 이야기

심석희, 코치에 폭행 당해 이틀간 선수촌 이탈 '충격'

심석희 폭행



심석희 폭행 / 사진 = YTN 방송 캡처

심석희 쇼트트랙 선수가 코치에게 폭행을 당해 선수촌을 이틀간 이탈한 사실

대한민국 경기일정

< 02.19.월 >

- 09:05  **컬링**
여자 예선 대한민국 VS 스웨덴
- 09:30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 예선 1 조 런 1
- 09:53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 예선 1 조 런 2
- 10:00  **프리스타일 스키**
여자 스키 하프파이프 예선 런 1
- 10:00  **피겨 스케이팅**
아이스 댄스 쇼트 댄스



심석희, 코치에 폭행 당해 이틀간 선수촌 이탈 '충격'

심석희 폭행



심석희 폭행 / 사진 = YTN 방송 캡처

심석희 쇼트트랙 선수가 코치에게 폭행을 당해 선수촌을 이틀간 이탈한 사실

대한민국 경기일정

< 02.19.월 >

- 09:05  **컬링**
여자 예선 대한민국 VS 스웨덴
- 09:30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 예선 1 조 런 1
- 09:53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 예선 1 조 런 2
- 10:00  **프리스타일 스키**
여자 스키 하프파이프 예선 런 1
- 10:00  **피겨 스케이팅**
아이스 댄스 쇼트 댄스

경찰 "조재범, 선수촌 등 7곳서 심석희 3년간 성폭행"

[중앙일보] 입력 2019.02.06 10:06 수정 2019.02.06 11:43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 [뉴스1]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조 전 코치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수사결과를 내놨다. 조 전 코치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경찰은 피해자인 심석희 선수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조

심석희-조재범, 만 6세때부터 그루밍 기간 있었을 것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06.04 01:49



(사진=KBS 캡처)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코치가 '아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조재범 전 코치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0차례에 걸쳐 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심 선수의 나이를 고려 조 전 코치가 아청법 위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검찰 내 성추행' 폭로 | 서지현

jtb
뉴스룸



시사 > 전체기사

현직 여검사 "8년 전 법무부 간부에게 성추행 당해" 내부망에 폭로

입력 : 2018-01-29 12:53

좋아요 0개



현(100%)되었습니다. **현** 여검사가 전직 법무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강제 성추행을 당한 이후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글을 검찰 내부 전산망에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29일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A검사는 지난 26일 검찰 내부 전산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릴 시기를

조회순

댓글순

공유순

1 잘못된 사망선고... 관
속에서 '11일간' 발버



2 '하이틴 영화인 줄' 이
상화-스벤 크라머의



3 파파다키스 의상 내려
가 가슴 노출... 돌려보



4 이상화 출전 차례되자
'췌'... 고다이라의 인



5 [영상] "XX, 내가 X같
냐" 홍대에 출몰한 래



6 "하용부 인간문화재도"...이윤택 표

7 대형병원 간호사의 죽음... 남친이

8 이상화 결선일 '선수촌 수면방해'

미투 캠페인

[요약]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며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

외국어 표기

The #MeToo Campaign(영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도 그렇다'라는 뜻의 'Me Too'에 해시태그를 달아(#MeToo) 자신이 겪었던 성범죄를 고백함으로써 그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 미국 할리우드의 유명 영화제작자 하비 웨인스타인의 성추문 사건 이후 영화배우 알리사 밀라노가 2017년 10월 15일 처음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성범죄를 당한 모든 여성이 '나도 피해자(Me Too)'라며 글을 쓴다면 주변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는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미투 캠페인을 제안한지 24시간 만에 약 5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리트윗하며 지지를 표했고, 8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MeToo 해시태그를 달아 자신의 성폭행 경험담을 폭로했다. 또한 미국의 체조 금메달리스트 맥케일라 마루니가 미투 캠페인에 참여하며 팀닥터 래리 나사르 박사에게 13살 때부터 성추행을 당해온 사실을 고백하는 등 사회 전반으로 파장이 일었다.

앨리사 밀라노

[숨기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앨리사 밀라노(Alyssa Milano, 1972년 12월 19일 ~)는 미국의 배우이자 가수이다.

출연 작품 [편집]

- 코만도
- 캠퍼스 대소동

음반 목록 [편집]

- 《Look in My Heart》(1989)
- 《Alyssa》(1989)
- 《Locked inside a Dream》(1991)
- 《Do You See Me?》(1992)

외부 링크 [편집]

- 앨리사 밀라노 - 공식 웹사이트
- 앨리사 밀라노 - 인스타그램
- 앨리사 밀라노 - 트위터
- 앨리사 밀라노 - 페이스북

앨리사 밀라노
Alyssa Milano



본명 앨리사 제인 밀라노
Alyssa Jayne Milano

[문화] '#미투' 확산

게재 일자 : 2018년 02월 19일(月)

침묵하는 고은... 곤혹스러운 작가회의



최영미 “문화계 조사·재발방지책 필요”

崔 시인·임경선 작가 등
여성·법조계 참여 촉구

고은, 입장표명 일절 없어
수원시 광고산 떠나기로

새 집행부 꾸린 작가회의
“4월 이사회서 논의” 밝혀

민족 시인으로 추앙받던 고은 시인의 성추행과 관련해 시인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없는 가운데 범 문화예술계 성폭력 조사 및 재발방지 공식 기구가 구성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고은 시인이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한국작가회의는 아직 새 집행부가 인수인계도 받지 않았다며 4월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고은



최영미



'미투' 열풍...연극계는 왜 성추행이 벌어지!

등록 2018-02-19 18:06:58



【서울=뉴스시스】최진석 기자 =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이윤택 전 극단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30스튜디오에서 성추행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견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한편 한국극작가협회는 이 전 감독을 회원에서 제명한다고 지난 17일 입장을 냈다. 이와 함께 한국여성연극협회가 성명을 내는 등 각종 연극 단체에서도 이 전 감독 사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18.02.19.

myjs@newsis.com

2. 인권감수성

인권이란,



세계인권선언

오늘의 주제는 인권감수성

인권, 인간의 권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인권감수성?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다양한 자극이나 사건에 대하여 매우 작은 요소에서도 인권적인 요소를 발견하고, 적용하면서, 인권을 고려하는 것

인권감수성은 사회와 제도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감수성을 의미한다





1968년 부터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장애인 마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 (과태료)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애인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경되었다

신체
身體

정신
精神

13년간 '식당 노예', 지적장애 노인 무일푼 노동시켜

한범수 | 기사입력 2016-10-20 06:50 | 최종수정 2016-10-20 10:10



◀ 앵커 ▶

지적장애 노인이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13년 동안 식당에서 노예처럼 일을 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전주서 친구 따라간 20세 장애인 실종 한달째

기사입력 2016/10/20 17:23 송고

가족 "골육종 치료 시기 놓치면 위험"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골육종을 앓고 있어 치료가 시급합니다. 목격하시면 꼭 연락주세요."

실종 장애인을 찾습니다!



- ◆ 이름 : 김재용 (만20세)
- ◆ 실종일시 : 2016년 09월 27일
- ◆ 실종장소 : 전북대학교 구정문 및 전주시청 근처
- ◆ 실종경위 : 친구를 만나러 나간 뒤 실종 상태임
- ◆ 인상착의 : 지적, 지체장애 동반 (뚱뚱한편)

- 오른쪽 허벅지 뼈를 이식하여 20cm 정도의 큰 수술자국이 남아있음.
- 머리가 짧고, 눈에 띄게 다리를 저는 걸음걸이가 특징 (오른쪽 다리)
- 어눌하며 낮은 저음의 소리로 짧고 단답형의 대화를 할 수 있음.

◆ 가정에서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보호하고 계시거나, 보신 분들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 연락처 : 010-6302-1992, 010-6687-2099, 010-4318-8397

'훈남' 해리 왕자 장애인 수영선수와의 대화법

입력 2016-10-20 06:31 수정 2016-10-20 13:02



영국 해리 왕자가 18일 버킹엄궁에서 장애인 수영선수 엘리 시몬즈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AP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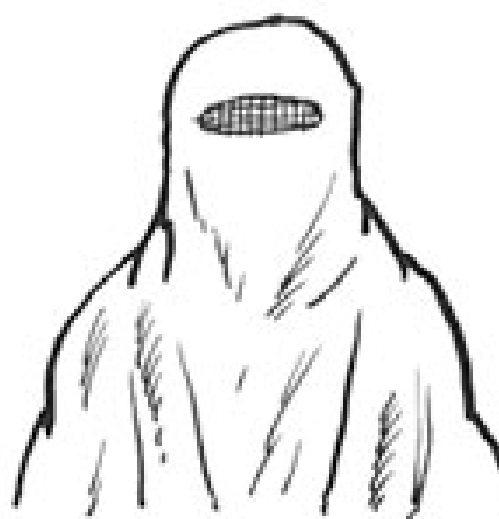


우리는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입니다.

우리는 서울시민 입니다!
우리의 인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

하나님이
당신들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부르카



온몸을 완전히 가림.
눈 그물로 가림
대부분 푸른색

니캅



얼굴 완전히 가림
눈만 노출
주로 사우디, 예멘

히잡



전통머리스크프
머리, 귀, 목
어깨 가림

차도르



얼굴만 내놓고
머리끝-발끝까지
가림(특히 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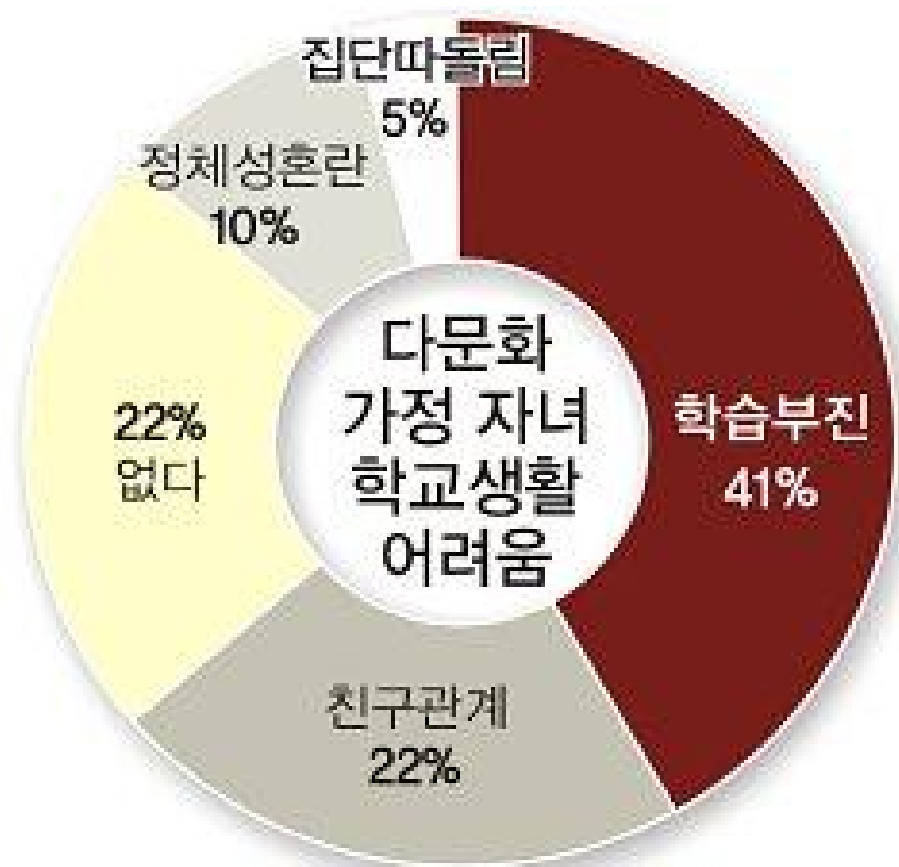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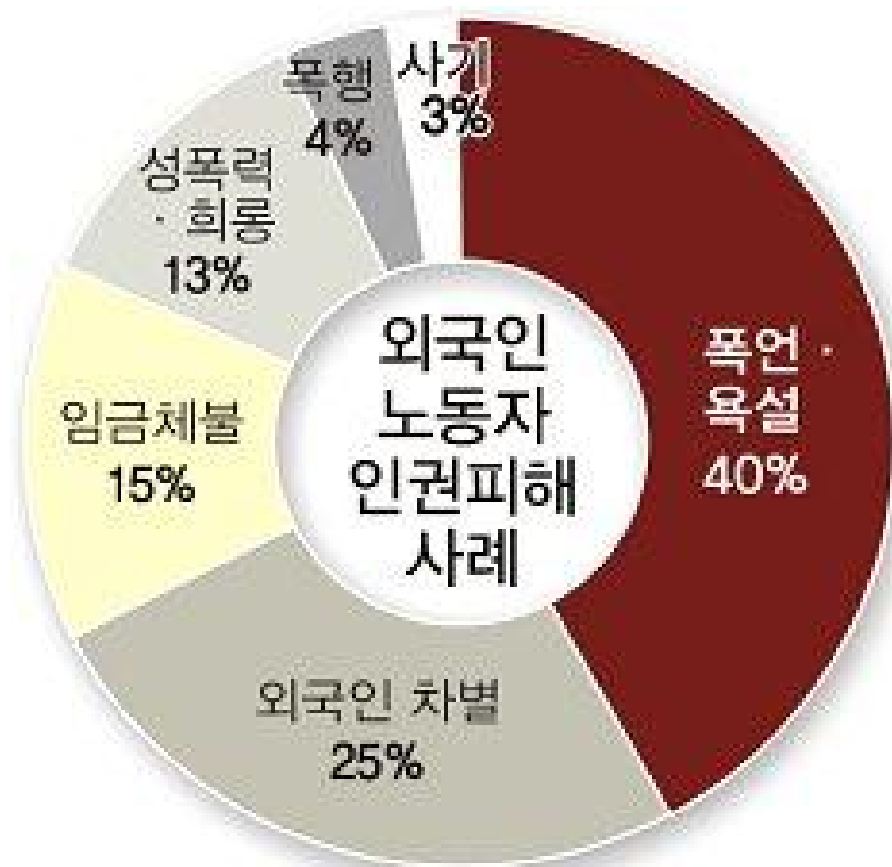
R

“스포츠 인권, 모두가 지켜야 할 행복권!”

스포츠인의 인권이 존중되고 행복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
스포츠인권익센터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문의전화 02-4181-119





자료: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국간인권위 광주사무소





이상한 나라의 집 이야기

| 주거권운동네트워크 엮음 |

집 인권이 다



성적 소수자 행사 불허, 인권 침해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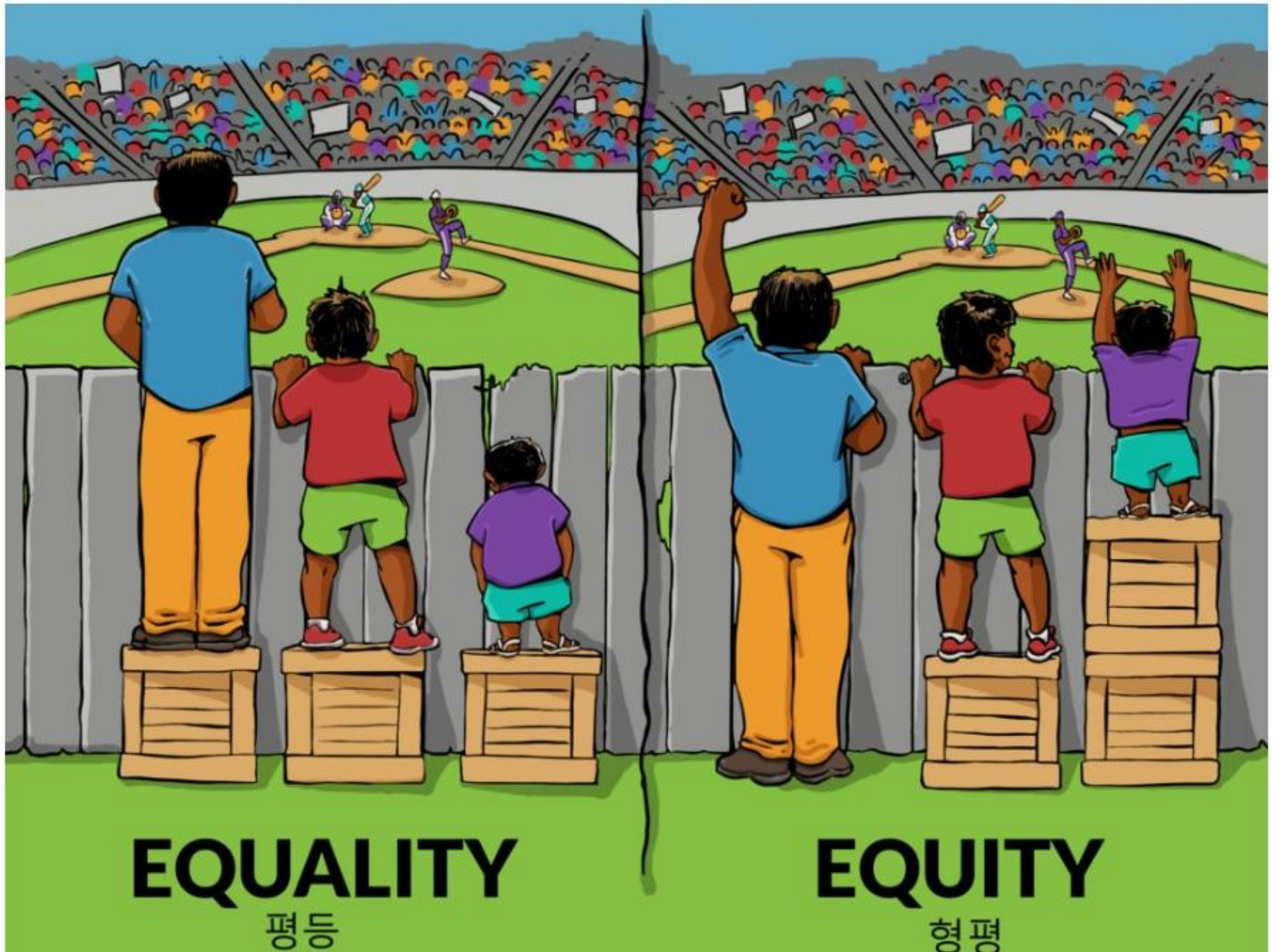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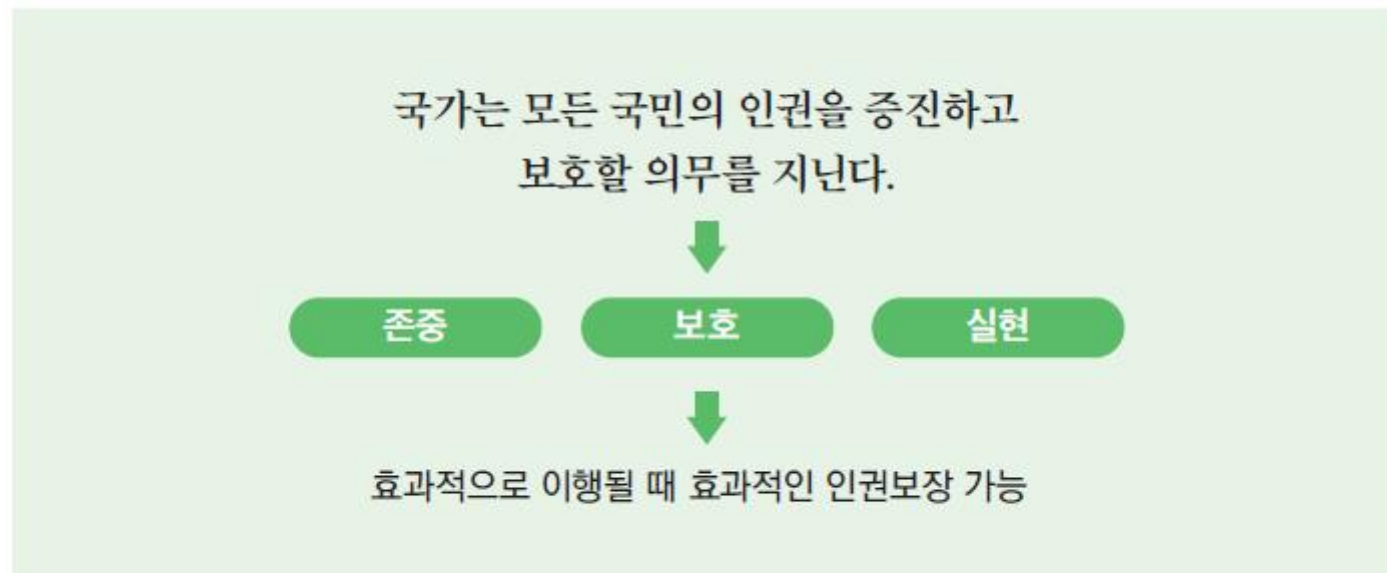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모두
전자주민증을~

대한민국
주민 번호
한개에 1원!





〈그림 2-1〉 국가의 인권보장 책무



3. 인권, 우리 생활에서는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합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



A screenshot of a newspaper page, likely from the 'Süddeutsche Zeitung' as indicated by the masthead. A blue bounding box highlights a section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which appears to be a list or index of names and dates. The text within the box is partially legible and includes names like 'Hans-Joachim...' and dates like '1945'.

학교주변 극장 일률제한은 '위헌'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4-05-27 20:02 | 최종수정 2004-05-27 20:02

앞으로 대학 주변에서는 성인영화관(제한상영관)을 제외한 모든 극장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주변에서도 상업영화관(성인영화관 포함)을 제외한 순수예술이나 아동·청소년 전용극장 설립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학교 출입문 반경 50m)에서는 극장 영업을 전면 금지돼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학교 정화구역내 극장 영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학교보건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극장 영업을 하려는 사람들의 직업의 자유와 표현·예술의 자유, 극장을 이용하려는 학생들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 소지가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학교 정화구역내 극장 영업과 관련, 대학교 주변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유치원과 초·중·고교 주변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각각 구분해서 내렸다.

이같은 결정은 관할 부처가 향후 법 개정시 유치원, 초·중·고교 주변에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극장이나 순수예술 및 아동·청소년 전용극장 등의 영업은 허용하되 상업영화관 영업은 현행대로 금지하라는 의미가 포함된 것이다.

재판부는 성인영화관은 이번 결정과 무관하게 영화진흥법상 규제에 따라 학교 정화구역내에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대학 정화구역에 ‘극장’을 금지하는 조항은 즉시 폐지하고,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공연장 및 영화관의 종류에 따라 법을 선택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전국극장연합회 강대진 회장은 “극장을 유해업소로 취급하던 법률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극장주들의 문화적 자존심을 세워준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올해 29살이 된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살아왔을까? 현재는 그동안 28,990여 개의 사건을 처리했다. 지난 한 해 동안만 리한 사건이 2,000여 건에 가깝다. 그리고 29년간 '위헌' 판결이 내려진 사례는 1,425건에 달한다. (수치: 2016년 기준)

1995년

동성동본 금혼 '헌법불합치'

"혼인에 있어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



(좌) 1996년, 성균관 유림대표 500여 명이 동성동본 혼인 허용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우) 1997년, 동성동본 부부들에 대한 혼인신고 접수 시작. /조선DB

성(姓)과 본(本)이 같은 남녀의 혼인을 금지하는 '동성동본 금혼'은 고려시대 성리학이 도입되며 한국 사회에 뿌리내린 것이다. 이들 남녀는 동거하며 사실혼의 관계에 있더라도 혼인 신고를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같은 사람과 교제하거나 결혼하는 것을 꺼렸다. 당시 대중가요에서 동성혼을 반대하는 취지의 노래가 나오기도 했고 그야말로 시대의 큰 이슈였다.

민법의 동성동본 금혼 조항은 1997년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으며 흔들리기 시작한다. 해당 조항은 1999년 1월 1일 부력을 상실해 동성동본 부부의 혼인신고가 가능해졌고, 2005년부터 민법상에서 금혼 규정이 폐지됐다.

▷ 관련기사 [무너진 동성동본 금혼](#)



사형제도 '합헌'

"강한 범죄억지력이 있으며, 폐지는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못함"



(좌) 2004년, 종교인연합 대표들이 사형제도 폐지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우) 2010년, 사형제도 합헌 판결 직후 종교·인권·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조선 DB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첫 사형은 1949년 살인범에 대해서다. 이후 군사정권 시대를 거치며 사형을 당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1997년 12월 30일 이후로는 형 확정만 할 뿐 실제 사형은 집행하지 않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한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사형제도는 지금까지 두 번이나 현재의 심판대에 올랐을 만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였다.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생명의 존엄성을 이유로 들지만, 존치론자는 인면수심의 범죄자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헌법소원은 1996년과 2010년 제기됐는데, 현재는 각각 7:2와 5:4(찬:반)로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간통죄 '위헌'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좌) 2008년 간통죄로 연행되는 탤런트 옥소리와 내연남, (우) 2016년부터 공개적인 불륜 사이로 지내고 있는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 /조선DB

우리나라의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남성이나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을 때 성립되는 범죄 행위로, 1953년 제정됐다. 1953년 이전에는 유부녀에게만 간통죄를 적용하다가 1954년부터는 남녀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로 바뀌었다.

간통죄는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2015년 총 5차례 헌재의 심판을 받았다. 헌재는 앞선 4번의 심판에서는 간통죄에 대해 합헌, 2015년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들어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08년까지 간통죄 합헌을 고수했지만, 헌재 내에서도 사회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1990년대에는 개인보다 가정의 보호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간통죄를 유지했는데, 2000년대 들어서는 폐지에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어찌됐건, 말 많고 탈 많았던 간통죄는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62년 만에 폐지됐다.

성매매특별법 '합헌'

"자발적 성매매라 하더라도, 성을 상품화하고 성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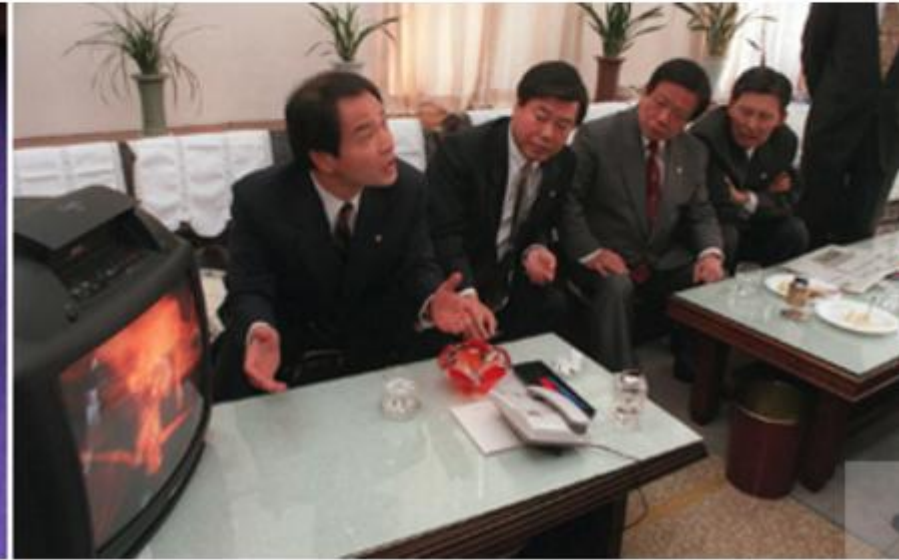
(좌) 2011년, 성매매여성들이 법 개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우)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이 나자 눈물을 흘리는 여성. /조선 DB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성매매특별법' 또한 현재의 단골 손님이다. 성매매특별법에서 강요에 의해 성매매를 한 여성은 피해자로 보고 처벌하지 않지만, 자발적 성매매 여성은 처벌 받는다. 지금까지 8번 현재의 심판을 받았지만 모두 '합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앞선 7번의 심판에선 단 1명의 재판관 만 이 위헌 의견을 냈으나, 가장 최근인 지난해 판결에선 위헌 의견이 3명으로 늘었다.

2016년의 헌법 소원은 성매매 여성이 직접 문제를 제기한 것도 이례적이다. 이전의 것들은 대부분 사창가의 포주가 위헌을 문제 삼았다. 13만 원에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해당 여성은 "성매매가 아니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호소했다. 현재의 일부 재판관 역시 이 여성의 의견에 동의하며 '성매매의 형사처벌이 오히려 음성화를 부추긴다'고 했지만, 현재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최종 합헌으로 결론 내렸다.

영화 사전심의 '위헌'

"심의제는 헌법에 금지된 사전 검열제도와 마찬가지로"



(좌) 영화 검열을 상징하는 사진, (우) 1996년, 여야 의원들이 영화의 폭력·선정성 장면을 보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조선DB

우리나라의 영화 검열은 일제시대부터 본격화됐다. 1960년대에는 영화 제작 전 시나리오와 각본을 승인받고, 제작 완성 후 재심사하는 3중 검열 제도가 법에 명시됐다. '가위질'로 표현됐던 당시의 영화 검열은 영화 중간중간의 내용을 잘라내는 것이었다. 안기부, 국방부 등에 의한 영화 사전검열은 80년대 후반까지 계속됐다.

영화 검열에 대한 헌법소원은 대학생 등으로 이뤄진 젊은 영화인 집단에 의해 제기된다.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광주항쟁을 다룬 영화 '오! 꿈의 나라'를 불법 상영한 영화사 대표가 기소된 것이 계기였다. 현재의 위헌 결정 이후 영화의 사전 심의는 폐지되고, 현재와 같은 상영 등급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일부 제한된 장소에서만 상영할 수 있는 '제한상영가' 등급이 존재하는 탓에, 종종 논란이 되기도 한다.

“4급이상 공직자 군면제 사유 공개는 기본권 침해”

등록 :2007-05-31 15:10 수:

현재, 헌법불합치 결정...내년부터 효력 상실

군 복무를 하지 않은 4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병역면제 사유인 질병 이름을 관보와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31일 국회 별정직 4급인 정모씨가 병역면제 사유를 공개토록 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 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이다.

병역사항을 관보와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규정한 공직자병역사항신고공개법 제8조는 연말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적 관심도가 낮은 4급 이상 공무원들까지 병역사항 공개 대상으로 삼아 모든 질병명을 예외없이 공개토록 한 것은 사생활 보호의 헌법적 요청을 현저히 무시한 것이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2000년

과외금지법 '위헌'

"국민의 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침해"



(좌) 1980년, 서울의 학 중학교에 붙은 불법 과외 금지 공고문. (우) 과외금지조치 이후, 오피스텔에서 이뤄지는 불법 과외가 성행했다. / 조선DB

1980년,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7·30 교육개혁조치'에 따라 재학생의 과외 교습 및 입시 목적의 학원 수강이 전면 금지됐다. 이때 단속반까지 운영하며 과외를 강력히 규제했고, 위반했을 때는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는 오히려 부작용을 낳아 과외가 음성적으로 성행하는 계기가 됐다. 이에 1981년에는 예체능계 과외 허용, 83년에는 하위권 학생들의 보충수업 허용, 84년엔 고3 학생들의 겨울방학 과외 허용 등으로 조금씩 규제를 완화하기에 이르렀다.

'과외금지법'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건 2000년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면서부터다. 하지만 헌재는 고액 과외에 대해서는 여전히 처벌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

‘재외국민 선거권 제한’ 선거법 헌법불합치

등록 :2007-06-28 14:55 수정 :2007-06-28 14:55

‘재외국민 선거권 제한’ 선거법 헌법불합치
"2008년 12월31일까지 선거법 등 개정해야"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해 28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 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조항은 선거법 15조 2항 1호, 16조 3항, 37조 1항 중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에 관한 부분, 38조 1항 중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등록이 된 투표권자'에 관한 부분, 국민투표법 14조 1항 중 '그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투표권자'에 관한 부분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중대 재판관)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 지방선거 참여권,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을 것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은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최모씨 등 15명이 낸 공직선거법 위헌확인 소송에서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 또는 국외거주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외항선원 및 원양어선 선원 10명이 "국외 항해 선원들에게 아무런 선거방법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선거법 위헌소송과 일본 영주권자 이모씨 등 4명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에게만 주민투표권을 준 것은 위헌"이라며 낸 주민투표법 위헌소송에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거권 제한은 그 제한을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개별적·구체적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할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기술상의 어려움이나 장애 등의 사유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비례대표 배분방식 위헌

일력 2001.07.19 (21:00)

뉴스 9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KBS 9시뉴스입니다.

현행 선거법의 근간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의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과 기탁금제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또 1인 1표제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정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 유권자가 던진 한 표로 지역구 의원과 전국구 의원을 동시에 뽑는 이른바 1인 1표 투표 방식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김효성(헌법재판소 재판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서도 별도의 정당 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

◎기자: 즉 지지 후보가 인물은 좋은데 소속 정당이 싫을 경우 한 번의 투표 때문에 싫어하는 정당을 지지해야 하는 모순이 생겨 절반의 선택권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서기석(헌법재판소 연구부장):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인 2표제를 실시하여야 하고 1인 1표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자: 이와 함께 5석 이상이나 5% 이상 득표한 정당에만 전국구를 배분하도록 한 조항 그리고 선거 출마시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내도록 한 2000만원의 기탁금 제도도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라는 이유로 역시 위헌처리됐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무더기 위헌 결정으로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법은 1인 2표제, 정당투표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KBS뉴스 정인석입니다.

헌재, 이혼 300일 이내 출산 자녀 전 남편 친생자 추정 헌법불합치

“모(母)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 침해”

기사입력:2015-05-08 14:31:57

가

가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성이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한 자녀는 전 남편(夫)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제844조 제2항은 모(母)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민법 제844조(부의 친생자의 추정) 제2항은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fangiox®



압도적 가성비 **39,800원**

예약 시작



‘운명의날’ 항소심 선고 출석하는 이재용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 도착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18. 2. 5

jieunlee@yna.co.kr

헌재,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 헌법불합치...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

헌재, 국회에 2019년까지 '대체복무제' 개선입법 요구
"대체복무제 도입, 국방력에 유의미 영향 미친다 보기 어려워"
"처벌조항은 개선입법 및 법원 후속조치 통해 해결 가능"

기사입력 : 2018년06월28일 15:44 최종수정 : 2018년06월28일 15:44

가+ 가- 프린트 좋아요 0개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금**은 법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판단했다.

프리미엄 정통 부적 신통부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헌재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1심서 또 무죄.. “처벌 아닌 대체복 무제로”

기사입력:2017-09-10 11:33:49



[로이슈 조기성 기자] 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20대 남성 두 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로 판단한 대법원과 상반된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이재욱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23)씨와 이모(23)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신씨와 이씨는 지난 2014년 9월과 11월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사 훈련을 받을 수 없다며 입영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 두 번째 무죄 판결

등록 :2018-02-01 17:02

부산지법, ‘1심 무죄’ 김씨에게 2심도 무죄 선고
‘유죄’ 선고했던 재판장 무죄로 돌아서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인 2017년 5월1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제앰네스티가 먼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병역거부로 처벌을 받았거나 재판중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 중단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과 관련해 두 번째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왔다. 첫 항소심 무죄 판결 뒤 1년4개월 만이다. 특히 이번 항소심 재판장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자신의 과거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해 눈길을 끈다.

66년 만에 폐지된 '낙태죄' ...향후 쟁점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 형법상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임부의 자기결정권 폭넓게 인정

-낙태 결정가능기간·처벌 폐지·미성년자 자기결정권 등 세부 사안별 의견 대립 불가피

문장원 기자 moon3346@naver.com

등록 2019.06.16 12:28:21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 4월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 '임부의' 자기낙태죄 조항과 업무상 동의낙태죄 조항 중 '의사' 부분에 대해 9명의 재판관 중 헌법불합치의견 4명, 단순위헌의견 3명, 합헌의견 2명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요점 중 하나는 제한적인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

1999년

군 가산점 제도 '위헌'

"평등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좌) 1999년, 재향군인회 회원들이 현재의 군 가산점 위헌 결정에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우) 여성부 장관과 국방부 관계자가 군 가산점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 /조선DB

'군 가산점'은 공무원이나 공기업 입사 시험, 일정 규모의 이상의 기업 채용 시 제대 군인에 대해 만점의 5% 이내로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히 1~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은 매우 민감한 문제였다. 1998년,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군 가산점 때문에 탈락한 사람들에 의해 헌법 소원이 제기됐다. 이 중에는 여성은 물론 장애가 있어 군 복무를 하지 못한 남성들도 있었다. 이에 헌재는 1999년, '공직자 선발에 있어 능력주의를 기초하지 않은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공식적으로 사라지긴 했지만, 군 가산점 제도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위헌 결정 이후에도 군 가산점을 부활시키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여러 번 있었는데 번번이 무산됐다. 남녀를 불문하고 갈수록 취업이 어려워지는 오늘날에는 군 가산점 부활이 여형·남형을 부각시키는 주제가 되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군 복무 기간에 대해 학점을 주는 제도를 추진해 논란이 일었다.

호주제 '헌법불합치'

"양성평등 및 인간존엄 원칙에 위배"



(좌) 2003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호주제 폐지 반대 전국 유림 결기대회', (우) 호주제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환호하는 여성단체 대표들. /조선DB

일제시대 때부터 우리나라 가족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던 호주제(戶主制)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종속되어 있으며, 남성 중심으로 호주 승계 순위를 정해놓은 법이었다. 여성의 경우 혼인 전에는 아버지가 호주인 호적에, 혼인 후에는 남편이 호주인 호적에, 남편 사후에는 아들의 호적에 올라야 했다. 이러한 법은 여성을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것과 더불어, 남아선호 사상을 조장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 이에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들의 호주제 폐지 운동이 꾸준히 벌어졌다.

2003년, 법무부는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현재는 5번의 변론 끝에 헌법불합치 결론을 내렸다. 호주제는 2008년 완전히 폐지됐고, 대신 가족 구성원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관계등록제가 시행됐다.

▶ 관련기사 [헌재 "헌법 불합치"... 시한부 선고받은 '호주제'](#)

헌재 “5급 공무원시험 연령제한, 헌법불합치”

등록 :2008-05-29 15:40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5급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32세로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 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으로, 이번 사안은 공직 취임권의 연령 제한과 관련한 첫 위헌 결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5급 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32세로 제한한 공무원임용시험령 16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수행 효율성 확보 등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지만 32세를 넘으면 5급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한도를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6급과 7급 공무원의 응시연령 상한을 35세까지로 규정하면서 그 상급자인 5급 공무원의 채용연령을 32세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5명의 재판관 이외에 조대현 재판관 등 3명의 재판관은 5급 공무원의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직업공무원 양성이나 직업공무원 제도 구현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 의견을 내 총 8명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어머니 재혼해도 자녀는 친아버지성' 규정 "남녀평등 위배"

입력 | 2003-02-17 18:49:00

법원이 어머니가 재혼을 해도 자녀는 친아버지의 성(姓)을 따라야 한다는 민법 규정은 '남녀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곽동효(郭東曉) 지원장은 "어머니가 재혼해 새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됐지만 성을 바꿀 수 없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A군(14) 남매가 낸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녀는 (친)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민법 제781조 1항은 성씨의 선택과 변경을 금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 곽 지원장은 "사람들이 재혼해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경우 남편이 데리고 온 자녀들은 그대로 남편(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부인이 데려온 자녀들은 새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곽 지원장은 "성 불변의 원칙은 가부장적 가족제도 하의 윤리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조항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기념(제10조)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유지라는 헌법규정(제36조 제1항) ▽부계혈족의 유지에만 치중,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제11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1999년 친아버지와 사별한 A군 남매는 2001년 어머니가 재혼, 새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기 위해 호적정정을 신청했으나 불가능하자 지난해 1월 29일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냈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4. 자원봉사과 인권

광주U대회 VIP 의전 자원봉사를 했던 일부 대학생들은 최근 “성희롱을 해도 참으라” 등의 교육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 자원봉사자는 “사전 교육에서 ‘만약 VIP가 성희롱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교육자의 질문에 ‘신고해야 한다’고 대답했지만 ‘뭘 신고까지 하시냐. 대회 끝나고 대처하자’는 식의 교육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2015.9.24.)

서울시 도보관광 자원봉사자가 프로그램에 참가한 시민을 성희롱했다가 항의를 받고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앞에서 직접 사과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시 도보관광 프로그램에 참가한 시민 A씨가 자원봉사자 B씨와 선릉부터 봉은사까지 둘러보고 지하철로 귀가하던 중 B씨가 자신의 엉덩이를 톡 쳤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결혼은 했느냐', '만나는 사람은 있느냐', '좋은 사람과 결혼하려면 넓은 곳으로 가야 한다'는 등 관광과 관계없는 이야기도 했다고 알렸다. A씨의 항의에 따라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지하철 역사 내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한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후 에스컬레이터를 함께 타는 것이 싫어 잠시 기다렸지만 B씨는 빨리 타라고 손짓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세계일보, 2015.4.7.)

사례 1 체육대회 시 선수단을 1:1로 지원하는 자원봉사활동이었는데 시간에 상관없이 선수단의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자원봉사 관리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연락이 와서는 개인적인 쇼핑을 위한 운전을 요청하거나 새벽에 와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있었는데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사례 2 자원봉사자 OO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자원봉사 관리자의 갑작스러운 요청으로 행사에 가게 되었다. 가보니 자리를 채우느라 동원된 듯한 느낌이어서 씁쓸했다.

사례 3 자원봉사자 OO씨는 청소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모 기관에 화단 꽃 심기 활동을 하러 방문하였다. 가보니 화단 꽃 심기는 금방 끝나버렸고, 기관 담당자는 유리창 청소랑 창고 정리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사례 4 집수리 자원봉사자 OO씨는 모 기관으로부터 집수리 봉사를 요청받았다. 촉박한 일정이라 어렵겠다고 했으나 계속 부탁을 해서 수락했는데 나중에는 무조건 끝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해서 곤란했다.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그냥 자원봉사를 그만 뒀어요. 문제제기 방법을 모르기도 하고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이라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불만을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성희롱을 할 때도 이 기관에 안 오면 되지 하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만둔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어르신들에게 그런 무시를 당하면... 어르신이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

자원봉사자 모집 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어 노동 강도를 예측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행사보조나 홍보부스 업무라고 해서 갔는데 무거운 짐을 나른다거나 부스 천막을 설치하는 활동도 포함될 때가 있어 예상했던 활동과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비가 오면 우의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업무 지침도 없어요. 어떤 때는 다른 곳은 간식도 받았는데 우리 쪽은 없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기다려보세요. 갑니다.'하는데, 물도 안오고 기다려도 결국엔 '물은 못 갖다 드립니다. 갖다 드세요.'해서 물 가지러 가니까 어디 있는지 없고...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

지역축제 자원봉사를 하다보면 팔뚝같은 신체접촉은 부지기수고요. (때리려고) 손을 올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남자 노인분들이 술마시고 오시는 경우도 많은데, 오픈된 장소이다 보니까 술드시고 오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여학생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위협을 많이 당하기도 해요.

국제 00대회 시 VIP석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만 불편하면 소란을 지르시는 거예요. 그곳에 오신 분들이 단체의 회장, 부회장이다 보니까 특권을 누리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자원봉사자들도 권리가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

큰 지역축제는 대행사에게 사업 위탁을 주어 진행을 하는데, 대행사 직원들이 자원봉사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리 담당 공무원과 협의가 되어 행사 계획부터 자원봉사센터가 대행사와 함께 논의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발생이 적지만, 자원봉사센터가 계획 수립에 참여하지 못하고 자원봉사자 모집만 하게 되는 경우는 조치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시설에 고등학교 아이랑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여자 분들이 있는데 거주시설 남자장애인이 갑자기 탈의를 하는 등 돌발 상황이 생긴 거예요. 어머니들이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못 가겠다. 딸 아이가 놀랐다고.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

자원봉사 현장에 인권침해는 아주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어떤 장애인의 날 행사에서는 종일(6-8시간) 자원봉사를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도시락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설사 받더라도 구석에 모여 눈치를 보면서 밥을 먹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러 왔는데 밥을 왜 먹냐고, 행패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행사에 인원동원이 필요할 때는 무작정 자원봉사의 취지는 고려하지 않은 채 자원봉사자들을 급히 모집해 인원동원용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예도 많습니다. 또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불편하고 싫은 이야기를 들어야 할 때도 많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일까요.

혹시,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잘못 되었다.'라는 인식을 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문제제기를 하고, 반복되지는 않아야 할 것이며, 개선이 되도록 목소리를 내야겠지요.

인권감수성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시작입니다.

수인한도를 넘어선다면, 법적 조치도 해야 합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약칭: 자원봉사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최종공포내용

행정안전부(민간협력과), 02-2100-3762

관 연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7.]

관 연 **제2조(기본방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7.]

관 연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법률적 조력을 얻고자 할 경우

1. 서정현 변호사(010-2025-8694)
2. 법률구조공단
3. 마을변호사
4. 경찰서 수사민원센터 상담변호사
5. 시청 구청 등 무료 법률상담제도 이용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함께 공유해요!